이 시 백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회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출산장려정책 안된다

전통성이 강한 나라일수록 출산에 관한 국민정서는 다출산을 선호한다. 많은 자녀수를 원하는 이유는 높은 영유아 사망률에 대비하여 자녀수를 여유있게 가지고자 하는 심리와, 또 다출산으로 인한 인구 성장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는 힘을 과시하고 동시에 경제적인 부(富)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었다. 산업혁명 이후 인구는 증가하더라도 결코 인구 증가에 비례하여 경제적 이득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인구를 자원으로 간주하여 많은 노동력을 경제적 가치로 믿고 인구성장을 촉진시키고자 한 「마르크스」의 이론은 허구로 밝혀지고 구시대적 퇴물로 역사의 뒤안길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편, 우리 나라의 경제 개발과정에서 보여준 출산조절 정책은 이미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경제개발 모델로 제시된 바 있으며, 이에 더불어 저출산력의 중요성은 새로운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개발정책의 중심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현재 우리 나라 출산력은 선진국과 같은 낮은 수준에 진입하였다. 이와 같이 저출산 수준에 도달한 것은 향후 인구학적 의미뿐만 아니라 선진국형 경제사회발전을 확신할 수 있는 사회지표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엔의 공식자료에 의하면, 여성개발 수준이 높은 선진국치고 출산력이 높은 나라는 단 한나라도 없으며, 여성개발 수준이 낮은 개발도산국 또한 출산력이 낮은 나라가 한나라도 없다. 이는 여성개발과 출산력 그리고 경제사회 개발 수준은 같이 간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발전에 비약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저출산력을 두고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부정적인 해석을 하면서 과거 가난했던 시절의 높은 출산력수준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출산장려정책까지 거론하고 있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저출산력과 관련하여 일부 사회계층에서 걱정하고 있는 두가지 문제를 고찰해 보자.

첫째는 저출산력이 계속되면서 인구구조의 변동으로 장래 노동인력의 부족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염려이며, 둘째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력이 계속 유지된다면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어 이에 따라 노인복지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걱정이다.

먼저 저출산력과 관련하여 노동력 수급문제를 보면 그 동안 우리 나라 출산력은 계속 하강하여 왔는데도 15~64세의 생산연령층 인구는 1960년의 1천 4백만명에서 1990년에는 2천 9백 70만명으로 늘

었고, 향후 저출산력이 계속되더라도 2020년경 까지는 3천 5백90만명으로 향후 노동인력 수급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세기 최첨단과학 문명사회를 앞에 두고 20년 후의 인력 규모의 중요성만을 오늘의 시점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현재 방치된 경제활동 참가율이 47퍼센트 수준밖에 안되는 여성 노동인력을 선진국 수준까지 적극적으로 끌어올리고 이들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제가 더욱 중요하다. 또 앞으로 20~30년 후에는 남북통일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때 독일의 예로 보아 우리 나라도 많은 군사인력이 일반 노동 시장으로 유입됨으로써 노동인력의 과잉 공급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도 깊이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지해야 할 사실은 현대 일부 산업현장에서 보이고 있는 노동인력의 부족 현상(특히 3D 업종)을 해결하기 위해 출생을 촉진한 들 출생한 아이들이 15~20년 후에 인력이 부족한 이들 업종으로 배치되어간다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또다른 관심사로서 저출산력이 계속되면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고 그로 인해 노인복지 비용부담이 높아간다는 걱정이다. 그러나 출산을 장려해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을 낮게 하거나 인구고령화 속도를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현재 고령인구의 절대 규모는 변하지 않은 채 복지비용 부담면에서 기존의 노인을 위한 복지비용에 더불어 출산장려책 때문에 출생한 어린아이를 위한 복지 비용까지 합친다면, 결국 국가는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된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 대책은 출산장려책으로 해결할려고 해서는 아니되며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줄어야 한다. 또 사실상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출생수가 줄어왔기 때문에 이 때 태어난 아이들이 노인이 되는 2030년 이후부터는 분명히 노인인구의 절대규모가 점진적으로 줄어간다는 인구학적 분석결과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어느 국가도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건강이 향상되면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출산력과 관련하여 정부가 이 정책을 결정하기 이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정부가 대상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는 방법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 정책을 가장 민감하게 수용하는 집단은 저소득층이 될 수 있다. 결국 국가의 출산장려정책은 저소득층의 자녀수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저소득층 인구가 급진적으로 성장하고 이들에게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사회 역기능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출산만을 유도한다면 그 후 문제는 심각하다. 경제 능력이 부족한 가정에서 출산장려정책에 의해 출생한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15~20년 동안 성인이 될 때까지의 건강관리 및 교육 등의 비용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만일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장려만으로 끝난다면 이는 대단히 무책임한 정책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고 국가 재정으로 출산 후의 모든 아이에게 육아비용까지 부담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출산장려정책은 여성들에게 직간접으로 출산을 권장하거나 압력을 주는 정책인데 이는 여성 건강 보호를 무시하거나 또는 유엔이 주장하는 여성의 생식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직접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구상하기보다는 여성, 아동, 노인 그리고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복지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PPFK